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퇴출 결정 C&중·지역 조선업계 표정

원칙도 기준도 없는 구조조정

'1·20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을 놓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부실판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채권단이 정부 압력에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한 평가를 진행,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 "투명한 기준도 없이 은행 이해 관계를 고려한 엉터리다", "지역 경제를 죽이는 편파적인 평가다"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회생 자신 있는데... 승복 못한다”

대불산단 협력업체들 “전략산업 지정엔 언제고...”

20일 C&중공업에 대한 퇴출 결정이 전해지자 해당업체는 물론 전남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조선업계 전반이 큰 충격을 휩싸였다. 더욱이 전남도가 조선업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업체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C&중공업 직원들 '망연자실'=이날 퇴출 소식을 전해들은 목포시 연산동 C&중공업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설계팀을 포함해 총무 등 270여 명의 직원은 수개월째 월급이 밀렸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하나로 버텨왔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져 공장 가동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회생을 위해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금융권이 성급하게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총무팀 박원재 대리는 “시설자금이 지원되지만 하면 바로 일어설 수 있는데 성급하게 퇴출 결정을 내려 수많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기에 내몰았다”면서 “죽고 싶을 뿐”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C&중공업 관계자는 “C&중공업과 협력업체 모두가 긴급자금 지원과 조속한 기업 실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금융기관은 실사기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서 “워크아웃이 무산된 책임은 금융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C&중공업 박원길 이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작년 12월3일 채권단 결의를 거쳐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된 뒤 채권단은 운영자금 부분에 대한 이

견만 노출했을 뿐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이런 가운데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퇴출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C&중공업은 작년 12월 워크아웃 절차가 승인되면서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유예기간이 정해진 상황이었다.

◇전남 조선업계 표정=전남지역 대표 조선소 2곳이 퇴출과 워크아웃 대상이 되자 대불산단 내 조선업계는 향후 지역업체에 미칠 파장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두 조선소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들은 줄도산하거나 지역 조선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퇴출과 워크아웃 결정에 따른 금융권의 향후 처리방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C&중공업 퇴출로 전남 조선업계의 신인도 하락도 우려되면서 선박 수주 등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지역 조선업계에 대한조선의 워크아웃 결정에 따른 채권단의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불산단 내 조선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지한 뒤 내광개진 풀”이라며 “앞으로 정부 및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진일(대원소트기계 대표) C&중공업 협력업체협의회 대표는 “워크아웃으로 한기다 회망을 걸었는데 실을 며칠 앞두고 퇴출이라니,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협력업체들은 모두 죽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C&중공업이 20일 금융권의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퇴출업체로 분류돼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조선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불산단에서 조업 중인 선박용 블럭 제조공장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채무액·자구노력 등 반영 안돼 부채 수조원 대형건설사 제외

◇“첫단추부터 잘못 꿰다”=정부와 금융권의 부실한 구조조정의 첫 단추는 대주단 협약에서부터 잘못 꿰여졌다.

채권단은 처음에는 건설사 대주단(채권단) 협약의 가입시한을 지난해 11월 17일경으로 정했으나 가입이 저조하자 23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등 혼신을 보였다.

채권단은 또 대주단에 가입하는 건설사들에게는 각종 보호조치와 자금지원이 강구되지만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유동성 지원이 없다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한 37개사가 대주단에 들어온 뒤에는 당국과 은행

별 금융위기 ▲부동산 가격 폭락 ▲미분양 아파트 급증 및 입주 해약 사태 등 최악의 건설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자구노력 계획 등도 반영하지 않아 미래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은행들은 1차 평가 결과가 알려지자 뒤 미흡하다며 보수적으로 다시 평가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타 조정항목’의 심사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 ‘엄성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차질 신용 경색의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한 37개사가 대주단에 들어온 뒤에는 당국과 은행

별 금융위기 ▲부동산 가격 폭락 ▲미분양 아파트 급증 및 입주 해약 사태 등 최악의 건설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자구노력 계획 등도 반영하지 않아 미래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은행들은 1차 평가 결과가 알려지자 뒤 미흡하다며 보수적으로 다시 평가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타 조정항목’의 심사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 ‘엄성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차질 신용 경색의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한 37개사가 대주단에 들어온 뒤에는 당국과 은행

채권은행 부담 작용

중소 건설사 희생양

소송 등 후폭풍 일듯

은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들도 워크아웃이나 퇴출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자세를 바꿨다.

◇엄성, 자의적 기준=은행들의 실망스러운 옥석 가리기는 어느 정도에 걸렸다.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말로 포장됐지만 은행들은 평소 거래기업들 ‘퇴출’시키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평가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형건설사는 그대로 두고, 부채가 1천400여억원에 불과한 대주건설을 퇴출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증거다. 대주건설은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에 대한 부채가 139억원에 불과해 은행권이 떠날 부담이 미미하다.

또 평가항목에서 비재무적 항목이 60%나 됐다. 최근 자료가 아닌 1년 전 재무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1년간 차입금 규모 및 지급보증금액의 증감률, 결제 어음의 증감률 등은 처음부터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글로벌

은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들도 워크아웃이나 퇴출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자세를 바꿨다.

◇엄성, 자의적 기준=은행들의 실망스러운 옥석 가리기는 어느 정도에 걸렸다.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말로 포장됐지만 은행들은 평소 거래기업들 ‘퇴출’시키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평가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형건설사는 그대로 두고, 부채가 1천400여억원에 불과한 대주건설을 퇴출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증거다. 대주건설은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에 대한 부채가 139억원에 불과해 은행권이 떠날 부담이 미미하다.

또 평가항목에서 비재무적 항목이 60%나 됐다. 최근 자료가 아닌 1년 전 재무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1년간 차입금 규모 및 지급보증금액의 증감률, 결제 어음의 증감률 등은 처음부터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글로벌

은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들도 워크아웃이나 퇴출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자세를 바꿨다.

◇엄성, 자의적 기준=은행들의 실망스러운 옥석 가리기는 어느 정도에 걸렸다.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말로 포장됐지만 은행들은 평소 거래기업들 ‘퇴출’시키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평가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형건설사는 그대로 두고, 부채가 1천400여억원에 불과한 대주건설을 퇴출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증거다. 대주건설은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에 대한 부채가 139억원에 불과해 은행권이 떠날 부담이 미미하다.

또 평가항목에서 비재무적 항목이 60%나 됐다. 최근 자료가 아닌 1년 전 재무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1년간 차입금 규모 및 지급보증금액의 증감률, 결제 어음의 증감률 등은 처음부터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글로벌

각계 반응

“편파적 잣대로 지역 성장동력 다 죽이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20일 금융권으로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퇴출·워크아웃 대상으로 포함될 때 대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대주건설과 전남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중추역을 맡아온 C&중공업에 대한 퇴출 결정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광주시=시는 대주건설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현재 14개 단지에 5천985가구가 사업 승인이었고 10개 단지 2천340가구를 분양했다. 이 가운데 4개 단지 1천146가구가 환급 이행절차를 밟고 있으며 6개 단지 1천194가구가 환급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있어 대주건설이 청산될 경우에도 분양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납입금 환급이 가능하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사업장을 인수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삼능건설이 맡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조성 사업과 경남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수완집단지 에너지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수립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주건설과 삼능건설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무분별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지역 전략산업인 조선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전남도는 전남지역 대

표 조선소 2곳이 퇴출 또는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C&중공업이 결국 퇴출 결정이 난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한조선까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 전략적 측면에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문제인데 관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지 금융논리만을 가지고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구조조정 내용을 전해들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

한 구조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추후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히, C&중공업이 퇴출당하고 대한조선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것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조선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채권단의 결정은 그렇듯 나아가 열악한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므로 민주당은 심사 기준에 대해 따지는 등 철저한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은 한파도 언급도 없이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anma' (산머)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packaging of the product, with text describing it as a 'heart-to-heart' product.